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06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치매” 용어의 “인지증”으로 변경 등 (서명옥의원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3
III . 참고자료	27
1. 병명 개정 국내외 사례(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3. 1. 16.)	27

I. 개요

1.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0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16.
- (3) 회 부 일 : 2024. 7.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치매” 용어를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가운데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 결과 과반 이상(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치매” 용어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도 급증해 2023년 기준 약 98만 명(65세 이상 노인의 10.41%)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

는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한편, 현행법상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뿐 아니라 비(非)치매·치매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가족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치매안심센터” 용어보다 더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려 함.

“인지건강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치매환자 뿐 아니라 고위험군 및 일반주민,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II. 검토의견

1. “치매” 용어의 “인지증”으로 변경 등(서명옥의원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 개정안은 “치매”, “치매안심센터” 용어를 “인지증”,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여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현행	개정안
<u>치매관리법</u>	<u>인지증관리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치매</u> 의 예방, <u>치매환자</u> 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u>치매퇴치</u> 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u>치매</u> 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인지증</u> 의----- -- <u>인지증환자</u> ----- ---- <u>인지증퇴치</u> ----- ----- ----- <u>인지증</u> 으로-----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치매</u> ”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1. “ <u>인지증</u> ”이란----- ----- ----- ----- ----- -----.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5.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다. (생략)
 -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치매관리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2. “인지증환자”----인지증으로-----인지증으로-----.
3. -----인지증이-----.
4. “인지증관리”---인지증의-----인지증환자에-----인지증에-----.
5. “인지증관리사업수행기관”-----중앙인지증센터나.-----광역인지증센터다. (현행과 같음)
라. -----인지증안심병원
마. -----인지건강센터
바. -----인지증관리사업-----
6. “인지증관리전달체계”-----인지증-----인지증관리사업수행기관-----.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
-----인지증관리에-----
-----“인지증관리사업”-----
-----인지증을-----인지증환자-----
-----.

② -----인지증환자-----
-----.

③ -----인지증과 인지증예방-----
-----.

④ -----
-----인지증관리사업-----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증관리 및 인지증환자-----

-----.

제5조(인지증극복의 날) ① 인지증관리-----
인지증-----
-----인지증극복-----
-----.

② -----인지증

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극복-----

-----.

제2장 인지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인지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국가인지증관리위원회-----
-----인지증관리에-----

-----.

② -----
-----.

1. 인지증-----

2. 인지증검진사업-----

3. 인지증환자-----
--
4. 인지증-----
5. 인지증-----
--
6. 인지증관리-----
--
7. 인지증환자가족-----
8. 인지증관리사업 및 인지증관리 전달체계-----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생략)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3. (생략)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9. -----인지증관리-----

③ (현행과 같음)

④ -----

-----인지증관리-----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인지증관리위원회) -----

인지증관리-----

-----국가인지증관리위원회-----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지증-----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기능) -----
-----.

1. 국가인지증관리-----

2. 3. (현행과 같음)

4. 인지증관리사업-----

5. -----인지증관리사업-----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 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 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

제3장 인지증연구사업 등

제10조(인지증연구사업) ① -----
-----인지증의-----
-----인지증 연구·개발 사업(이하 “인지증연구사업”이라 한다)-----
-----.

② 인지증연구사업-----
-----.

1. 인지증환자-----

2. 인지증-----

3. (현행과 같음)

③ -----인지증연구사업-----

-----.

④ -----인지증연구사업-----

-----.

⑤ -----

-----인

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

지증연구사업-----
-.

⑥ 인지증연구사업-----

-.

제11조(인지증검진사업) ① -----
-----인지증을-----
-----인지증검진사업-----.

② 인지증검진사업-----

-----.

③ 인지증-----

-----.

④ -----인지증검진-----

-----.

제12조(인지증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인지증환자-----인지증치료-----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인지증환자의 가족지원사업) ① -----인지

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증환자-----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인지증환자-----

-----.

1. (현행과 같음)

2. 인지증환자-----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지증환자-----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① -----

-----인지증으로-----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관련 사업과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② (생략)

제13조(인지증등록통계사업) ① -----
-----인지증의-----

-----인지증등록통계사업-----
-----.

-----.

② -----인지증등록통계사업-----

-----.

제13조의2(인지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인지증 관련-----인지건강센터-----
인지증정보시스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
-----인지증-----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인지증실태조사의 실시) ① -----인지증-----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

-----인
지증환자-----

-----인지증에

-----.

1. 치매검진사업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생략)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생략) 8.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 ④ (생략)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2.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3. (생략) 4. 치매연구사업 지원 5.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6. (생략) 7.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1. 인지증검진사업 2. -----인지증환자----- 3. -----인지증환자----- 4. (현행과 같음) 5. 인지증등록통계사업 6. -----인지증정보시스템----- 7. (현행과 같음) 8. -----인지건강센터----- 9. -----인지증과-----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중앙인지증센터의 설치) ① -----인지증관리----- -----중앙인지증센터-----. 1. 인지증관리사업수행기관----- 2. 인지증관리----- 3. (현행과 같음) 4. 인지증연구사업----- 5. 인지증관리사업----- 6. (현행과 같음) 7. 인지증등록통계사업 ----
---	--

8. 제13조의2에 따른 <u>치매정보시스템</u> 의 구축·운영의 지원	8. ----- <u>인지증정보시스템</u>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제17조에 따른 <u>치매안심센터</u> 업무의 지원	10. ----- <u>인지건강센터</u> -----
11. <u>치매 인식개선</u> 교육 및 홍보	11. <u>인지증 인식개선</u> -----
12. <u>치매 관련</u>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2. <u>인지증 관련</u> -----
13. <u>치매와</u> 관련된 국내외 협력	13. <u>인지증과</u> -----
14. 그 밖에 <u>치매와</u>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4. ----- <u>인지증과</u>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중앙치매센터</u> 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u>중앙인지증센터</u> -----
③ 제1항에 따른 <u>중앙치매센터</u> 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 <u>중앙인지증센터</u> -----
제16조의2(<u>광역치매센터</u> 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u>치매관리</u>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u>광역치매센터</u>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2(<u>광역인지증센터</u> 의 설치) ① ----- <u>인지증관리</u> -----
1. <u>치매관리사업</u> 계획	1. <u>인지증관리사업</u> -----
2. <u>치매</u> 연구	2. <u>인지증</u> -----

3. 제17조에 따른 <u>치매안심센터</u>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3. ----- <u>인지건강센터</u> ----- ----- ----- -----
4. <u>치매</u>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4. <u>인지증</u> ----- -----
5. <u>치매</u>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5. <u>인지증</u> ----- -----
6. <u>치매환자</u> 및 가족에 대한 <u>치매</u> 의 예방·교육 및 홍보	6. <u>인지증환자</u> ----- <u>인지증의</u> -----
7. <u>치매</u>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u>인지증</u> -----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u>치매</u> 관련 업무	10. ----- --- <u>인지증</u>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u>광역치매센터</u> 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u>광역인지증센터</u> ----- ----- ----- ----- ----- -----.
③ 제1항에 따른 <u>광역치매센터</u> 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u>광역인지증센터</u> ----- ----- ----- ----- ----- -----.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u>치매</u>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 <u>인지증</u> ----- ----- ----- ----- -----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
영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
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
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
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
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
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
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
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하
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④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치매 관
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인지증안심병원의 지정)

① -----인지증의-----
-----인지증 관련-----

-----인지증안심병원-----
-----.

② 인지증안심병원-----

-----.

③ -----
-----인지증안심병
원이 인지증전문병동-----
-----인지증 관련-----

-----.

④ 인지증안심병원-----

-----인지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치매안심병원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6의3. (생략)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

-----.

⑤ 인지증안심병원-----

-----.

제17조(인지건강센터의 설치) ① --
-----인지
증예방과 인지증환자-----
-----인
지건강센터---인지건강센터-----
--.

② 인지건강센터-----
-----.

1. 인지증-----
2. 인지증환자-----
3. 인지증등록통계사업--
4. 인지증-----
5. 인지증환자-----

6. 인지증환자-----

6의2.·6의3. (현행과 같음)

6의4. 인지증-----

7. -----
--인지증관리-----

③ 인지건강센터의---인지건강센
터에 인지증환자-----

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 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 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 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 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 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 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2.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 리에 관한 정보제공
3.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4.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 적 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 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

-----.

④ 인지건강센터-----

-----.

제17조의2(인지증상상담전화센터의 설 치) ① -----인지증예방, 인지증환자-----

-----인지증상담전화센터-----
-----.

② 인지증상담전화센터-----
-----.

1. 인지증-----
2. 인지증환자-----

3. 인지증환자-----

4. 인지증환자-----

5. -----
-----인지증-----

③ -----
---인지증상담전화센터-----

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
터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
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
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
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
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
치·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
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
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인지증 관련-----
-----.

④ -----인지증상담전화센
터-----

-----.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
-----인지증관리사업-----

-----.

1. -----인지증연구사업
-----인지증검진사업
-----인지증환자의

-----인지증등록통계사업-----

1의2. -----
-----중앙인지증센터, 광역
인지증센터 및 인지건강센터---

1의3. -----인지증상
담전화센터-----

2. 인지증관리사업-----

3. 인지증관리사업-----

4. 인지증관리사업-----

· 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생 략)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u>치매관리사업</u>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u>치매관리사업</u>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 ----<u>인지증관리사업</u>----- ----- ----- ·.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인지증관리사업</u>----- ----- -----.
---	---

□ 개정안에서는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면서, 법 제명을 「치매관리법」에서 「인지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개별 조문(항)에 규정된 “치매”도 “인지증”으로 변경하였음. 그 외 “치매안심센터”는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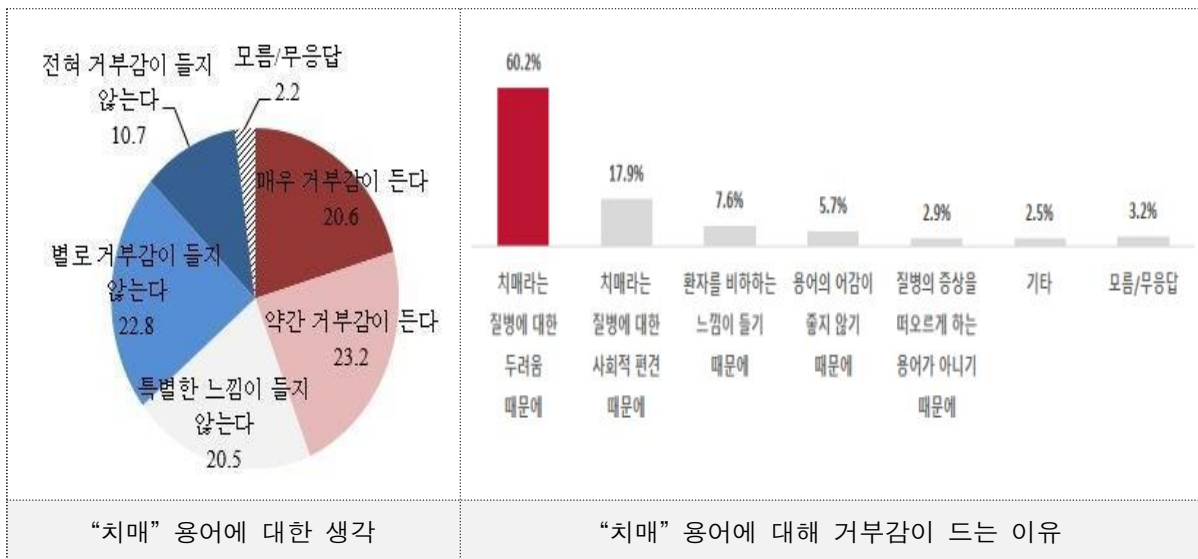
□ 치매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¹⁾하는 용어로,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²⁾,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 생활

1)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참고

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痴呆: 어리석다, Dementia)”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어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대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임.

< “치매” 용어의 거부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6.25.)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³⁾를 구성하여 “치매” 용어의 대체 필요성 및 대체 용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바도 있음.

2)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3) “「치매」용어 개정을 통한 인식개선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3. 1. 16.)

< 치매 용어 개정협의체 활동 결과 >

◦ 구성: 노인정책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공공(3명), 치매 관련 의료 분야(5명), 복지·돌봄 분야(3명), 가족협회(1명) 등 총 12명 ◦ 회의결과		
날 짜	안 건	주 요 논 의 내 용
2023. 1. 16.	‘치매용어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결과 발표 및 치매 용어 개정 논의	◦ “치매” 용어 개정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위원이 행정 용어 측면에서 용어 변경 필요성에 공감
2023. 3. 17.	“치매” 대체 용어 관련 논의	◦ 협의체 위원들이 제시한 대체용어,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치매” 대체용어 후보군으로 ‘인지저하증’, ‘인지병’ 도출
2023. 4. 21.	“치매” 대체용어 후보군(인지저하증, 인지병)에 대한 각 협의체 위원(기관) 의견조화 결과 공유 및 논의	◦ “치매” 용어 개정은 의학용어 개정이 아닌 행정용어 개정사항이라는 것에 협의체 위원 동의 - (인지저하증 검토 의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국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순화된 용어 - (인지병 검토 의견) 용어가 간결하여 사용하기 적절 - (치매 관련 기관명칭 검토 의견) 치매안심센터를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여 치매관리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

*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해외 사례를 보면 대만은 실지증(2001년), 일본은 인지증(2004년), 중국은 뇌퇴화증(2012년), 미국은 주요신경인지장애(2013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 치매 용어 개정 해외 사례 >

연도	대만(2001)	일본(2004)	홍콩(2010)	중국(2012)	미국(2013)
변경 용어	실지증	인지증	뇌퇴화증	뇌퇴화증	neo-cognitive Disorder 주요신경인지장애
주도	학계·기관	정부	학계·기관	학계·기관	학계

* 자료: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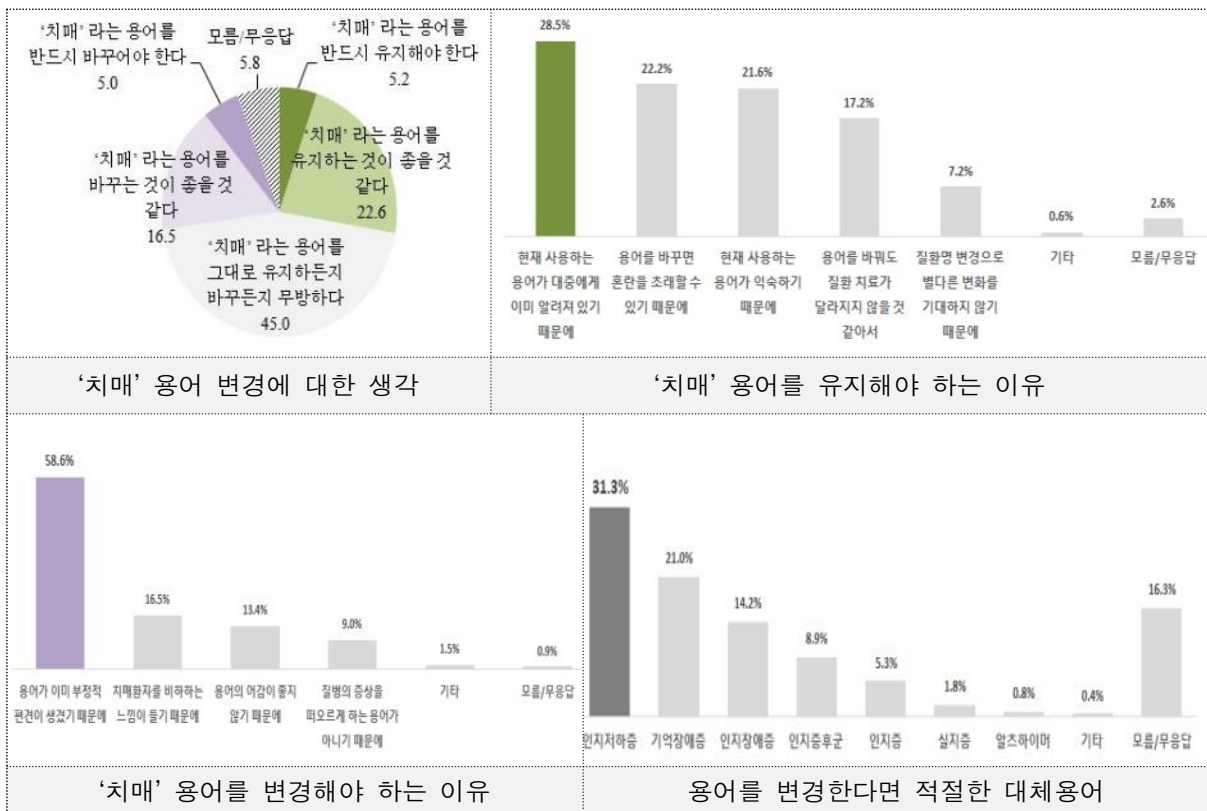
- 개정안과 같이 “치매”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인지증”이라는 명칭의 적절성 논의⁴⁾와 함께,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익숙한 “치매” 용어 변경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간판·홍보물 등 변경으로 국비 총 79억원 비용 소요 추계(보건복지부)

□ 참고로,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치매” 용어 유지 27.8%, 변경 21.5%, 그대로 유지하든지 바꾸든지 무방 45%로 조사된 바 있음.

< “치매” 용어 변경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6.25.)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치매” 용어는 부정적 인식과 사회

4) 2023년 10월,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결과(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2,500명, 웹조사)에 따르면, 치매 대체용어 선호도는 인지저하증 80.6%, 인지증 7.0%, 인지병 3.0%, 기타 9.4% 순이고 치매 대체용어별 적합도는 인지저하증 84.0%, 인지증 41.1%, 인지병 31.3% 순임.

적 편견을 유발하므로 “치매” 용어를 “인지증” 등 적정 용어로 변경하하는 등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의료계(대한의사협회·대한한 의사협회 등)는 기존 치매 용어와 혼동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대구·강원 등)는 개정 실익에 비해 비용만 소요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 “치매” 용어는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므로 개정이 필요함. ◦ “치매” 용어를 “인지증” 등 적정 용어로 변경하고,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방문 거부감 해소를 위해 “인지건강센터”로 변경이 바람직함.
대한 의사협회	◦ 의학용어로 사용되는 치매 대신 대체단어로 변경시 중증도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오히려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에 있어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 용어 개정시 수반되는 홍보비용, 수행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제반비용이 소요되고, 용어개정 후에도 의학용어 개정 등 용어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용어 변경에 따른 근거 중심 및 의학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치매질환과 관련된 전문가 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대한 간호협회	◦ 용어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인지저하증”으로 수정 제안
대한 치매학회	◦ 행정용어에 한해 용어 변경은 동의하나, “인지증”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어 “인지병” 용어로 수정 제안
대한 한 의사협회	◦ “인지증”의 경우 치매관리 주요 문제인 BPSD(행동심리증상)의 의미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며, 치매 외 인지장애와 구분이 어려워 다른 질환명과의 충돌 등 우려
한국환자 단체연합회	◦ “인지증”으로 변경은 용어에 대한 적절성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

서울특별시	◦ 치매 용어가 의학적, 사회적, 정책적으로 확립된 정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인지증'으로 변경시 기존의 치매라는 진단적 용어가 갖는 명확성과 정확성 상실 우려 ◦ 용어 변경에 따른 교육 및 홍보, 각종 시스템 업데이트 등으로 재정적 자원과 인력 투입 등 사회적 비용 발생
대구광역시	◦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 용어는 질병상태를 기술하는 의학용어로서 전 세계 공통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자문, 공론화, 범의료계의 사전 합의 필요 ◦ 치매환자 등 대상 다양한 인지건강 사업을 이미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 중이므로 본연의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행 명칭 유지 필요
강원특별자치도	◦ "치매" 용어가 대중에게 알려져 있고 용어 변경시 관련 업무 수행기관 및 환자들의 혼란 초래 우려, 치매 질환의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1 국내 병명 개정 사례

① 정신분열병 → 조현병 (2011)

- '07년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 동호회 주관 병명개정 성명서 '대한정신분열병학회'로 전달, 관련 학회에서 대체 명칭 공모, 심포지엄, 간담회, 공청회 개최('08~'11), 조현증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11)

② 간질 → 뇌전증 (2014)

- '05년 간질 전문의 등 주관 간질환자 대상 사회적 차별 등에 관한 조사 ('05~'07), 대한간질학회, 한국간질협회 공동 명칭 공모전 시행('08~'09)',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에서 의학용어로 인준('10), 간질 법령용어 뇌전증으로 정비('14)

2 해외 치매 병명 개정 사례

① (일본) 인지증 (認知症) ('04)

- 전문가 중심*으로 치매 용어 변경에 관한 협의 시작, 후생노동성 주도로 병명 개정 검토위원회 구성, 일반국민 의견 수렴 후 병명 개정
- * 노년정신의학을 중심으로 의사, 연구자들이 치매용어 변경에 관한 협의 시작

② (대만) 실지증(失智症) ('01)

- 민간에서부터 90년대부터 '치매증'이라는 용어의 거부감 제기, '01년 정부가 관련법(심신장애자권익보장법)에서 '실지증'으로 개정

③ (홍콩) 뇌퇴화증(腦退化症) ('10)

- 민간에서 '05년 '치매증'에 대한 홍콩 시민의 태도 의견조사, 이후 정부가 '10년 '치매증'에서 '뇌퇴화증'으로 용어 변경('10.10월)
- * 집행위원회 설치, 대체 용어 공모 등 실시

④ (중국) 뇌퇴화증(腦退化症) ('12)

- 민간에서 '12년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후 '치매 용어 개정 제안서'를 의학용어심사위원회에 제출, '12년 '치매증'에서 '뇌퇴화증'으로 용어 변경

⑤ (미국) 주요인지증(major vascular neurocognitive disorders) ('13)

- 정신질환 분류기준인 DSM-5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Dementia'에서 '주요인지증(major vascular neurocognitive disorders)'로 변경

문 의 처

02)6788-5499